

투데이 칼럼

백년지대계는 없다... 기성 정치의 구태만 복사한 전북교육감 선거

전북 교육의 미래를 논해야 할 교육감 선거판이 기성 정치권의 진흥탕 싸움을 그대로 베껴 쓴 '복사판'으로 전락했다.

정당 공전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는 이유는 교육만큼은 진영 논리와 표 계산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엄중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전북 교육감 선거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도덕성 쪽로전과 정치공학적 단일화 공방, 그리고 거대 노총들을 앞세운 세력 대결이 판을 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유성동 집 예비 후보의 중도 사퇴 고백이다. 선한 뜻을 품고 출마했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람, 조직,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역부족이었다. 현실의 벽은 너무 두껍고 높았다"라고 털어놓은 대목은 우리에게 깊은 씁쓸함을 안겨준다. 정당의 간판과 재정 지원을 받는 일반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후보 개인이 편액에 해당하듯 거대한 조직과 수역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결국 순수한 교육적 비전만을 가진 신인은 평할조차 내밀기 힘들고, 기존 정치 세



이 장 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력의 탄탄한 조직망을 움켜쥔, 대규모 동원 능력을 갖춘 이들만 살아남는 왜곡된 구조가 증명된 셈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현실적 한계' 때문에 벌어진 단일화 과정마저도 기성 정치의 가장 탁한 부분인 '고위직 거래(매관매직)' 의혹과 고발, 발전으로 얼룩졌다는 점이다. 단일화 직후 불거진 정책공약적 지본 나누기 논란과 상호 녹취록 폭로전은 이곳이 과연 교육 수장을 뽑는 자리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든다. 양대 노총의 지지 성명이 연이어 공유되고, 어느 후보가 더 많은 단체의 타이를 끌어 모았는가를 두고 여론 물이를 하는 행태 역시 전형적인 기성 정치의 세 파시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거친 소음들 때문에 정작 전북 교육이 마주한 엄혹한 현안들은 지

독하게 묻히고 있다. 도교육청의 중기 학생복지 계획을 보면 당장 초등 전체 학생 수 5만 명 선이 무너지는 2030년에는 전교생 9명 이하의 도내 '통계학 필수 검토 대상' 학교가 무려 80개교에 육박할 전망이다. 향후 4~5년의 임기 동안 매년 10개 인위, 도합 50개에 달하는 우리 고향의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비극적인 시간표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라면 방송 토론화와 공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디테일한 정책 검증의 장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후보들은 "내가 적임자"라는 선언적 구호와 인물 프레임 싸움에만 몰두할 뿐,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이 괴를 토하듯 던지는 절박한 요구사항에는 귀를 닫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돈과 조직이 없으면 출마를 포기해야 하고, 그 장벽을 넘기 위해 정치적 거래의 유혹에 빠지는 선 거판에서 전북 교육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성 정치를 복사한 싸움꾼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전북 농산어촌 교육을 살려낼 정교하고 실천적인 처방전을 권진 교육 행정가다. 이에 필자는 이번 선거판이 외면하고 있는 전북 교육의 삼중고(三重苦)를 정밀 진단하고 그 대안을 연속 기획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출발선은 비교, 종착선은 미어터지는 전북의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폐교 자원과 매년 2만 명씩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어떻게 상생 매칭할 것인가(2편), 교실 5명 중 1명이 다문화 배경인 입실·장수 등 농산어촌 군 지역의 공교육을 다문화 맞춤형 혁신으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3편), 그리고 확연 선형화되어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기 위해 사교육과의 정교한 역할 분담 및 공약식 학년제를 파괴하는 '학습 속도의 자율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4편)에 대한 담대한 화두를 던진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세 파시를 멈추고 이 진짜 현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독자재언

차량 내 절도(차털이), 우연 아닌 우리의 '방심' 노린다

늦은 밤, 퇴근을 마친 심 씨는 집 앞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차량 문은 잠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지갑과 널브러진 차량 내부였다. 범인에게는 단치 잠기지 않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는 '단 몇 초의 행동'이면 충분했다. 우리가 흔히 '차털이'라고 가볍게 부르는 차량 내 절도는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 운전자의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 차량 내부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눈에 띄게 두는 행동, 그리고 '살마내 차를 털겠어'라는 작은 방심 속에서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문이 열린 차에서 불건

을 깨내는 행위를 단순한 절범으로 치부하곤 하나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거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만약 범행이 2인 이상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겹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다. 형법 제331조(특수 절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중죄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으면 형법 제332조(상습범) 조항에 의거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차량 내 절도는 주택가와 아파

트 주차장, 심지어 CCTV가 촘촘히 설치된 곳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의 범행 트렌드는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큰 소음을 내기보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편을 골라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뉘엿ະ 출근길이 되어서야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곤 한다. 아무리 순찰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가장 확실한 방어벽은 운전자의 예방이다. 차량 내 절도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첫째, 하차 시 '문 잠금' 직접 확인:

스마트키를 믿고 그냥 떨어지기보다, 사이드미러가 정상적으로 접혔는지 또는 문손잡이를 직접 당겨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차량 내 귀중품 방지 금지: 현금, 지갑, 휴대전화, 노트북 등 범죄자의 표적이 될 만한 물건은 단 몇 분이 라도 눈에 띄게 두지 말아야 한다. 셋째, 안전한 주차 환경 선택: 늦은 밤 주차 시에는 가급적 CCTV 식별이 잘 되고 조명이 밝은 장소, 혹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을 선택해야 범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범죄는 거창한 틈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빈틈에서 시작한다. 심형조 전주덕진경찰서형사과경장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국세청, 하나은행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공공성 부족을 질타한 바 있어,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급파했다.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다.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은행권, 최근 10여 년 이내 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처음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용까지는 지회가 잘 모르겠어요. 50명 정도라고만 들었지..."라고 말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건, 은행이 거둔 막대한 수익이 어디에 쓰였는지이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에선 성과가

불분명한 경영진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 퇴직자 고액 지분료 지원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런 비용 처리가 적절했는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부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들여다볼 거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지급된 50억 원 가까운 퇴직 공로금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질타 발언 직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그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라고 질타했다. 금융권의 공공성을 앞세운 정부 압박이 세무 조사로까지 이어지면, 이번 조사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주시보건소, 시민 대상 무료 치매 선별검사

전주시보건소가 시민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조기검진 협약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는 인지장애를 겪는 분인이 인식하기 쉽지 않은 질병인 만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라면 부모의 건강 상태와 치매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시는 치매 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8개 협약 병·의원을 통해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판명될 경우에는 추가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협약 병·의원으로 의뢰해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건소는 추가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해서는 △치매 치료 관리 및 도움 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치매 환자 돌봄 재할 지원사업 △인공지능(AD) 돌봄 인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치매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보건소는 60세 이상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3분 이내에 간단하게 치매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인공지능(AD) 간편치매체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까지 스마트폰 전화(1668-4712) 또는 QR코드를 통해 링크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 협약 의료기관 등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30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